

2023.03.07.(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최혜영 의원실 02-6788-7381

을지로위원회,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3년 3월 7일(화) 13: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3/7(화) 13:40,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열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7일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공동 주최하여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박주민 위원장과 최혜영 상임위원을 비롯해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 및 김하나 광주지부 부지부장, 김정희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보육교사의 교육 및 휴가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를 투입해 공백을 최소화하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가 올해로 시행 14년째를 맞이했으나 기간제의 한계를 악용해 수년간 집단해고가 반복되면서 노동 안정성이 약화되고, 보육의 질 또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설명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노동권 보호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고용 불안정 관련 대책 수립, 대체교사 수급 및 비담임 교사제도 기본계획 공개, 현장 보육교사와의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위원장과 최혜영 상임위원 등은 “대체교사 고용 불안정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관계 지자체 및 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끝/

2023. 3. 7. (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과 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14년 동안 대체교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집단해고와 신규 채용을 반복하며 대체교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

최근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100% 출연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들은 고용한 지 2년이 되는 대체교사들을 집단해고했다.

대전광역시는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을 방문한 대체교사들을 경찰을 동원해 강제 연행한 후 형사처벌까지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대체교사들의 로비 농성 54일이 지나는 지금까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데다 3월과 5월에도 40명이 동일한 사유로 집단해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동일근로에 대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이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마저도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고용불안의 일차적 책임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에게 있는 이유다. 정부 차원의 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보육교사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던 원장 직접 채용 대체교사 제도는 미미한 예산집행율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했던 선임교사제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2022년 시범사업, 2023년 전면 적용이라고 적시해 놓았지만, 실적이 미미하자 또 다시 사라졌으며, 2023년에는 비담임교사

제도가 나타났다.

수십만 보육교사들의 교육 및 휴가권을 보장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대체교사 제도를 해마다 신상품처럼 내어놓은 보건복지부와 보육정책과의 무책임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부와 보육정책과가 내어놓는 새로운 제도는 대체교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오직 어린이집 원장들의 채용권과 운영권에 맞춰져 있다.

원장 직접채용, 선임교사 등의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어린이집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보조인력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 기존의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년간 운영해온 대체교사 사업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 구조 문제를 대체교사들과 기초지자체에게 전가하지 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길 요구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대체교사 수급 문제 해소와 비담임교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현장 보육교사들과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소통창구를 마련하길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보육정책과가 저임금 구조에서도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헌신해 온 보육대체교사들을 쓰고 버리는 1회용품 취급하지 말고 제대로 된 처우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대체교사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고용을 승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